

리영희의 ‘비판’과 ‘실천’으로서의 국제정치이론: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길*

구 갑 우 | 북한대학원대학교

이 논문의 목적은, 리영희의 국제정치비평 읽기를 통해 그의 ‘국제정치이론’을 추출하는 것이다. 주요한 읽기의 대상은, 리영희 국가이의 개념에 대한 수용과 비판, 중국과 미국과 북한의 핵의 국제정치에 대한 비판이다. 리영희는 체계화된 국제정치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가 제도권 국제정치학자가 아니라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국제정치비평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론이 현실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현실세계가 왜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묻고 그 세계를 변혁해야 하는 비판이고, 현실세계를 이론화한다는 의미에서 매일의 실천일 수 있다면, 리영희의 국제정치비평에는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을 지향하는 비판과 실천으로서 ‘국제정치이론’이 담겨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주제어: 리영희, 국제정치비평, 국제정치이론, 비판, 실천, 탈식민, 탈패권, 탈분단

I. 문제설정

리영희(1929~2010년)는 공식적인 국제정치학자가 아니었다. 경성공립공업학교 전기과와 국립해양대학 항해학과 졸업이란 그의 학력도 분과학문으로서 국제정치학과 거리가 있다. 안동공립중학교 영어교사와 한국전쟁기 영어통역장교, 외신부 기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란 그의 경력은, 분과학문으로서 국제정치학이 아닌 현실의 국제정치에 근접해 있다. 특히 한국전쟁이라는 국제정치적 비극의 현장을 몸으로 경험한 후 1957년부터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일하면서 리영희는 다시금

*본 연구는 2016학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문 심사위원들과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년도 국제정치이론분과 선생님들의 유익한 논평과 비판적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정치 현장 한가운데를 살았다. 외신부 기자로서 그의 관심 주제는, 탈식민 또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던 베트남, 중국, 가나, 쿠바 등의 국가였다(김삼웅 2010). 기자 생활을 하며 부업으로 국군연합참모부의 ‘일일 국제정세 보고’를 작성하게 한 리영희의 곤궁한 삶은(리영희 2005, 196), 국제정치가 그를 포획하게 한 또 다른 계기였다.

따라서 리영희의 국제정치 공부의 성과는 논문(論文)이 아니라 ‘기사’(記事)와 ‘비평’(批評) 또는 ‘평론’(評論)의 형태로 출현했다. 기사가 객관성의 포장을 갖는다면, 비평 또는 평론은 당파성에 기초한 글일 수 있다. 그러나 리영희는 이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리영희가 언론사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학으로 옮기기 전인 1971년 2월 『외신기자회보(外信記者會報)』 창간호에 실린 글에서 한 ‘기사’에 대한 발언이다.¹⁾

우리나라의 외신기사, 해설은 어쩐지 ‘무국적’적인 듯싶다. 모든 외신기사에 어떤 ‘입장’이나 ‘내셔널리티’를 부여하지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 위에 서서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제적 시야는 안 잡힐 줄 안다.(리영희 2006a, 460)

당파성에 기초해서 당파성을 극복할 때,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즉 기사와 비평이 다르지 않은 글이라는 생각이다.

리영희의 국제정치비평에는 이 당파성이 특정한 ‘시각’(perspectives)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2006년 1월 『전환시대의 논리』의 개정판 서문에서 리영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허위의식을 타파하는 현실인식, 편협하고 왜곡된 반공주의를 거부하는 넓은 세계

1) 이 글은, 1974년 창간과 비평사에서 발간한 『전환시대의 논리』에 실려 있다. 『경향신문』이 창간 70주년을 맞아 출판인들을 대상으로 1945년 이후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을 조사했을 때, 『전환시대의 논리』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리영희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저자”로 평가되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전환시대의 논리』를 “대한민국 지성사에 치명적 해독을 끼친 책”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2016년 11월 21일 참조. 『전환시대의 논리』는 2006년에 개정판이 출간되었고, 같은 해에 리영희 저작집도 나왔다. 이 글에서는 2006년 출간된 책들을 주 대본으로 삼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 필요할 경우 초판이 게재된 간행물과 출간년도를 밝힌다.

적 관점, 냉철한 과학적 정신을 계몽하고 민주적 시민운동에 앞장서는 이론적 역할을 나름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리영희 2006a, 5)

정리하면 리영희의 시각은, 허위의식인 이데올로기와 구분되는 '과학', '반공주의 비판', '실천'으로서의 '이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 제도화된 국제정치학계도 과학적 연구란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때, '비판'과 '실천'은 리영희 국제정치비평을 특징짓는 두 요소였다.

리영희는 “이론은 잘 모르지만”(리영희 2006a, 457), “특히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리영희 1977, 3)는 등의 표현을 통해 이론이란 그 무엇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지만, 기실 비판과 실천이 이론일 수 있다. 이론의 정의 그 자체가 쟁점이다. 실증주의적 시각에서 이론은 주어진 현실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tool)일 수 있지만, 이론은 그 현실세계가 왜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묻고 그 세계를 변혁하려는 비판(critique)일 수 있고, 다른 한편 현실세계를 이론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현실세계를 이론화한다는 의미에서, 즉 이론화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자 삶의 형태일 때 이론은 매일의 ‘실천’(practice)일 수 있다(Zalewski 1996). 리영희의 국제정치비평에는 도구, 비판, 실천으로서의 이론이 담겨 있음을 보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특히 이 작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제도권 국제정치학계가 국제정치학이란 분과학문이 패권국가 미국의 부상과 연결되어 있는 미국산의 수입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정치이론의 ‘한국적 정체성’을 모색하던 것과 대조하는 일이기도 하다.²⁾ 제도권 국제정치학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달리 1960년대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완제품으로서의 이론—예를 들어 카(E.H. Carr)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그리고 모겐소(H. Morgenthau)의 권력이론—를 수입하던 인용의 시대였다. 1970년대가 국제정치이론의 ‘수입대체화 산업화’ 시기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서구에서 생산된 이론‘들’을 수입해 소개하거나 재구성하는 수준이었다(박상섭 1988; 백창재·구갑우 2002). 리영희의 간략한 이론적 발언인 ‘국가이론 비판’과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인 ‘핵의 국제정치 비판’에 관한 글을 읽으며 한반도적 맥락을 고려하는 이론의 형성을 시도하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2) 1956년 분과학문의 공동체로서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설립되었고, 1963년부터 학회지로 『국제정치논총』이 발간되었다.

II. 국가이익론 비판

“힘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은 미국의 주류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국가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있)다(Morgenthau 1973). 마치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의 효용, 기업의 이윤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 국가이익이다. 국가이익 개념은, 마치 인조인간처럼 이기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되는 국가가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이 발생하는 무정부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의존해야 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설명력을 획득할 수 있다. 즉 국제정치는 “힘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 모겐소의 정의다.

리영희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모겐소를 195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극단적 반공주의인 “매카시즘의 빨갱이 잡이(witch hunting)의 시련에 굴복하지 않은 진정으로 용기있는 소수의 지성인이고 애국자”(리영희 2006a, 35)로 평가하지만, 도구로서의 국가이익 개념의 수용과 국가이익 개념에 대한 비판이란 양가적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진술은 국가이익 개념의 수용으로 읽힐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은 특히 강대국들은 우리가 중요시하는 신의나 약속보다는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국제사회에서의 행동원리로 삼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리영희 2006a, 284)

“정치적 영향력은 군사력과 곁들여서 ‘세력’(power)이라고 불린다.”(리영희 2006a, 299)는 언명은 모겐소의 번역에 가깝다. 1970년대 “중·미·일·소의 강국정치”, 즉 강대국의 “파워 폴리틱스”(power politics)에 따라 “객관적인 한반도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을까 한다”(리영희 2006a, 251)라 전망하는 것도 수용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도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다.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리영희의 준거는 영국 노동당의 이론가이기도 했던 정치학자 해롤드 라스키(H. Laski 1930)의 『근대국가에서의 자유』(*Liberty in the Modern State*)에서 쓴 한 구절이다. 그리고 리영희의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국가이익이나 국가안보라는 표현을 빌리는 내용과 실태를 분석해보면 그 문제와

관련된 어느 특수 개인, 또는 어느 특수 이익집단 및 세력이 드러난다. ...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집권세력이 내세우는 국가이성은 처음부터 이성적 토의를 그 분야에서 배제해버리려는 원리이다. 바로 이처럼 간단한 이유에서 그것은 자유와 어울릴 수 없다. 국가이성은 진리도 정의도 전제하지 않으며 오직 행복을 요구한다.(리영희 2006a, 28-30)

국가권력을 장악한 개인들과 집단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반공주의'의 위장 아래 거짓을 진실로 교육하고 선전하고 '법'으로 강요해 왔다.(리영희 1999, 5).

국가이익은 특수한 이해관계를 보편적 이익으로 포장하는 표현이란 주장이다.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을 정초한 콕스(R. Cox)가 1981년 『밀레니엄』(*Millennium*)이란 학술지에 발표한 글에서 주장했던 “이론은 항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란 진술을 떠올리게 한다. 이론은, 특수한 이익을 국가이익이나 국가안보와 같은 보편적 담론으로 전화시키는 매개체란 의미다. 달리 표현하면, 개념의 집합체로서 이론은 시공간과 분리되어 보편적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³⁾

물론, 주류 국제정치학계도 국가이익 개념을 비판한다(이근욱 2007). 예를 들어 한미 FTA의 찬반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찬반 모두 국가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울 때, 국가이익 개념은 마치 만병통치약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개념으로서 효용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국가이익 이외에도 제도나 정체성과 같은 변수들이 국가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고, 국제정치에서 발생하는 국가들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에서 국가이익이 고정될 수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이론적 이유다. 그러나 리영희의 국가이익 개념 비판은 보다 근본적이다. 국가이익을 특정 세력의 이익과 연계하

3) 리영희보다 앞선 세대의 제도권 국제정치학자인 이용희(2013[1962])는 “국제정치학은 그것이 형성되어 온 고장. 시기에서 우선 고찰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말한 바 있다. 호프만(Hoffman 1977)이 지적하는 것처럼, 국제관계학이 이차대전 이후 미국패권과 관련된 ‘미국적 사회과학’(American social science)이라 할 때도 이론의 시공간성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호프만의 수업을 들었던 국제정치학자로 동맹이론가인 월트(Walt 2011)는 국제관계학이 여전히 미국적 사회과학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전히 그렇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월트는 호프만식 문제제기와 더불어 국제관계학이 여전히 미국적 사회과학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권위주의적국가들에서 사회과학의 저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면서 국제정치(학)의 국가중심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한다.⁴⁾ 국제정치의 윤리적 차원에 대한 문제설정이 그것이다.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주류인 현실주의의 근본가정은, 첫째 국제정치가 본질적으로 갈등적 성격이어서 무정부상태는 규칙이고 질서·정의·도덕은 예외라는 것, 둘째 사회적 실재의 본질은 집단이고 근대세계에서 그 집단은 국민국가이며, 셋째 정치적 삶에서 우선성은 힘과 안보에 있다는 것이다(Gilpin 1986). 리영희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내세운 사회주의국가들의 관계, 대표적으로 중국과 소련의 관계도, 마르크스-레닌주의도 아닌, 민족주의와 국가 이기주의였음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서는 이 측면이 더 현저함을 인정한다.

이데올로기를 같이한다는 국가나 당 사이에 그러할진대, 단순히 현실적 이해관계로 결합되는 나라들 사이, 그것도 어울리지 않게 강대한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이데올로기나 슬로건이 얼마나 허망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소 관계의 교훈이라 할 수 있겠다.”(리영희 2006f, 241)

현실주의의 가정처럼 국제정치가 이데올로기가 아닌 힘의 정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1991년 출간한 수필집에서는 구조주의적 현실주의인 신현실주의(Waltz 1979; Keohane 1986)를 연상하게 하는 진술인 “질서가 외부로부터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지속되는 구조가 체제라는”(리영희 2010, 23) 표현도 보인다.

그러나 리영희는 1971년 계간지 『문화과 지성』에 발표한 “강요된 권위와 언론자유”에서 미국·베트남 전쟁의 과정에서 “정책의 윤리성”이 없었던 현실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통킹만에서 월맹 어뢰정이 불법으로 미국 순양함을 공격했다는 조작으로 의회로부터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 정부와 군부는 그 의회 결의와 그 조작으로 흥분된 미국인 감정을 ‘현실’로 하여 다음은 대규모 폭격을 ‘현실화’한다.(리영희 2006a, 33)

4) 리영희의 길과 달리, 서구중심적, 강대국중심적인 국가이익의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안보적 이익 이외에 경제적, 문화적 이익과 민족적 이익을 추가하는 방식의 비판도 존재한다(구영록 1996). 한국적 국제정치이론 모색의 한 방향일 수 있다(백창재·구갑우 2002).

“미국의 군부는 확실히 ‘국가 내의 국가’를 형성”(리영희 2006a, 31)했다는 주장은, 국가이의 비판을 넘어선 ‘국가 비판’이다. 지성인들이 “역사의 ‘현실’을 수락할 뿐 역사에 ‘작용’하려 하지 않”은 결과라는 현실주의 비판이다.

1990년대 즈음에 들어서면, 현실주의를 수용하며 비판하는 리영희 입장은, 강대국만을 행위자로 인정하는 국제정치학에서 약소국의 국제정치학으로 가게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는 덕행은 지난 시기에 뼈에 사무친 박해를 받아온 피해자들의 마음에서 우리나라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해자가 함부로 할 말은 아니다.(리영희 2006d, 24)

강자인 미국은 ‘히트’하고 ‘스테이’(버텨)한다. 약자는 ‘히트’하고 ‘런’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인 다른가? 다른 것은 강자와 약자라는 것뿐이다.(리영희 2006d, 127)

더불어, 그가 도달한 또 하나의 지점은, 국가에서 개인으로라는 ‘반(反) 국가적 국제정치학’이다. “철저한 민족주의자”(리영희 2006d, 364)를 벗어난 결과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현실주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 Niebuhr 1932)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에서처럼, 1980년대 말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이 발생할 즈음, “인간이 개인으로서는 이성적 존재임이 분명한데 인간이 집단화했을 때에는 이성을 상실한다는 것”(리영희 1999, 235)을 수용한다.

국가와 계급이 사고의 기준이었던 사회주의도 국가보다 시민과 사회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즉 추상적인 ‘국가’에 두었던 가치를 구체적 존재인 ‘인간’에게 옮기고 있다. 그 새로운 사고는 당연히 ‘국가주의적 세계관’에서 ‘전 인류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수반한다. … 권위주의적 국가관과 국가 지상주의 사상의 장송곡이 울리고 있다.(『자유인』, p. 86)

또 다른 변화는 국가에서 국가를 넘어선 지역(region)으로 이동이다.

지역적 정체성은 이미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초국가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우호적·비우호적인 공통의 지역적 조건들의 공유를 통해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리영희 1999, 235)

현실주의를 지양하는 ‘규범적 국제정치학’(Erskine 2013)의 핵심인 국경을 넘어서는 정의(justice)와 세계주의의 추구 그리고 의무론적 윤리학의 편린들이 보인다.

그러나 리영희가 규범적 국제정치학으로 선회한 것은 아니다. 냉전의 해체가 발생 하던 세계사적 격변기인 1990년대에도 리영희는 “미국과 한반도(남이건 북이건, 또는 남·북을 합쳐서)의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이기주의를 도외시키고 그 이해의 첫발자국도 옮길 수 없다”는 언명을 하고 있고, 동시에 “후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고 말할 때(리영희 1999, 5-11), 리영희는 선과 악이란 이분법적 규범성이 배제된 국가이익으로 회귀하고 있다. 리영희에게는, 실증성에 기초한 비판과 실천, 즉 도구로서의 국가이익과 비판과 실천으로서 국가이익 비판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III. 핵의 국제정치 비판

핵무기의 출현이 국제정치에 미친 결과는 체제전복적이었다(박건영 2012). 핵무기의 파괴력은 핵국가(nuclear weapon state)가 비핵국가의 심리와 행동을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게 했다. 미국의 핵독점체제에서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험 이후 핵복점체제로 이행한 후에는, 핵국가들의 관계에서 공멸(共滅)의 핵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핵억제’(nuclear deterrence)의 개념이 등장했다. 핵무기는 한편으로 ‘매력’(attraction)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포’(revulsion)이기 때문이다(Barash and Webel 2002). 즉 핵과점체제의 국제정치에서는 핵국가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핵국가들과 비핵국가들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비핵국가들에게 핵우산으로 제공되는 핵무기는 매력이지만 적의 핵무기는 공포이기 때문이다. 리영희는 이 핵의 국제정치의 현실을 중국, 미국, 북한에 집중해서 분석했다.

1. 중국의 핵

리영희는 1949년 국가로 등장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정책을 ‘제도외교’와 ‘상황외교’로 구분했다. 제도외교가 정부 간 외교를 의미한다면, 상황외교는 “국제정치와 정세를 움직이는 민간관계, 여론경향, 도의적 판단의 작용 등 다양한 제도적인 세

계”(리영희 2006a, 65)로 정의된다. 제도외교 무대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국가 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황외교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반제, 반식민, 반봉건 혁명 및 민족해방인민전쟁을 국가이념으로 표방하는 중공으로서는 그 국가내부의 그러한 세력과의 유대를 중요시해야 (하며), … 제도적 관계인 정부간 우호와 중공이 중요시하는 상황관계인 민중·이데올로기 등의 관계를 조절해야 하는 이율배반적 요구는 중공외교의 아킬레스건이”(리영희 2006a, 75-6)라는 것이 리영희의 생각이었다.⁵⁾

달리 표현하면 사회주의이념을 대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중국외교에서 상황외교가 보다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이익’ ‘대공 이기주의’가 중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리영희 2006h, 217)는 언명도 함께였다. 그가 1953년 한반도 정전체제의 수립 이후 1954년 제네바 정치협상에 등장한 “주은래 외교”를 “중국 내부 실태와 의지+객관적 세계정세 변동 및 시대정신+인간 주은래=중국외교”로 정의하면서, 미소와 달리 중국의 외교전략이 “진영(블록)화”에 있지 않고 “연합전선”의 형성에 있다고 할 때, 이른바 “제3세계”의 지역이익에 대한 기대도 엿볼 수 있다(리영희 2006h, 193, 195). 당시, 제3세계는 ‘비동맹’, ‘빈곤’, ‘식민화된 경험’이란 상호 연관된 특징을 통해 구성된 개념이었다(Slate 2004). 특히, 리영희는 두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과 동맹으로 연결되지 않은 국가군(群)인 제3세계적 시각에서 중국외교를 보고자 했다.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최초의 유색인종 정상회담 모임이었던 반동회의에 대해 리영희는 “중공의 평화공존 외교라는 매혹적인 정책의 절정”으로 극찬했다. 1949년 중국의 주은래와 인도의 네루가 합의한 ‘평화공존 5원칙’—“영토보전과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침, 내정불간섭, 국가관계의 평등, 호혜, 평화공존”—이야말로 리영희에게는 약소국의 시각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던 듯하다(리영희 2006a, 60, 67). 중국의 외교정책이 강대국질서 중심적이지 아니라는 그의 판단도 이 해석을 가능하게 한 요소였다.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과도한 긍정은, 중국의 핵개발에도 투사되었다. 리영희는 중국의 핵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5) “남한은 제도외교로 북한을 포위, 고립화해온 반면 북한은 상황외교로 남한을 포위 고립화 해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식해도 좋을 때다”(리영희 2006h, 195)는 언명도 이 구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1963년 6월에는 미·영·소 3대국만의 협의와 결정에 의한 ‘핵실험 부분적 정치협정’이 체결되었다. 그에 뒤이어 체결된 ‘핵확산 금지조약’(1968)은 미국과 소련의 핵군사력의 압도적 독점체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 그것(핵실험 부분적 정치협정)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무장 해제하려는 미·소의 공모로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이치다.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독자적 과학·기술 능력으로 개발한 제1차 원자폭탄의 실험으로 미·소 핵 독점체제에 큰 구멍을 뚫어버렸다. 소련이 중국을 그 지배하에 묶어두려고 의도했던 원자무기 제작 원조협정의 폐기와 핵실험 금지조약 및 핵확산 금지조약은 중국에 관한 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리영희 2006f, 240)

리영희 이 진술은, 1963년의 시점에서 북한이 중국의 핵보유를 선호하며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반대하던 것과 정확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구갑우 2014).⁶⁾

그러나 1963년의 미영소가 동의한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은 반핵·평화운동의 성과였다(Wittner 2009). 미국의 반핵단체인 SANE(Committee for a Sane Nuclear Policy)은 핵전쟁 위기를 초래한 1962년 10월 쿠바미사일 위기 직후 11월부터 미국과 소련의 핵실험 금지조약 협상을 매개했고,⁷⁾ 1963년 6월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을 이끌어냈다. 당시 중국정부와 프랑스정부가 강대국이 핵과점을 유지하기 위한 위선적 시도라고 비난했지만, 이념을 달리하는 거의 모든 정부들의 지지를 얻었던 일보였다. 1968년의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과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 비핵지대화조약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연장성으로, 이 맥락에서 핵전쟁은 ‘상상할 수 없는’(unthinkable) 선택이 되어 갔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를 예견하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를 반핵·평화운동 없이 설명하기란 어렵다. 리영희도 “베트남전쟁은 하위 동맹국을 위해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보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고), 남베트남의 운명이 이를 입증했다”(리영희 1999, 148)고 언급하기도 했다.

리영희에게, 반핵·평화운동과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연계는 서구중심적이고,

6) 그러나 1955년-1960년까지 소련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중국에게 핵기술을 이전하는 협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동혁·채준형 2017).

7) SANE과 더불어 WSP(Women Strike for Peace), 노벨화학상과 평화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L. Pauling), 그리고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B. Russell)과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A. Einstein)이 주도한 ‘퍼그워시회의’(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등이 주요 행위자로 활동했다.

약소국의 시각을 결여한 설명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리영희는 중국의 이념의 확산을 위해 필요했다는 논리로 중국의 핵보유를 정당화했다.

미국의 핵군사력에 놀려 중공의 민족해방 이념을 따르는 아시아 세력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현실이 중공지도자들로 하여금 많은 경제부담을 무릅쓰고 핵군사력 건설에 전념케 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로 중공이 핵폭탄과 대륙간 탄도무기의 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미국과 중공 간에 작용하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리영희 2006a, 72)

더 나아가 “미소를 상대로 대국으로서의 위신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는 정치적 이유와, 미소의 핵공격에 대항하는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군사적 동기가 결합된”(리영희 2006a, 80-2) 산물로 중국의 핵개발을 언급할 때는,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전형적인 세력균형정책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보인다. 리영희의 이념적 정도와 약소국중심적 시각이 중국의 핵을 과도하게 ‘긍정’하게 했다.

2. 미국의 핵: 한반도 핵문제 (1)

적으로 간주하는 세력이 기대와 달리 긍정적 행동을 할 때는 외부 ‘정세’(situation)를 그 행동의 원인으로, 반면 기대한 것처럼 부정적 행동을 할 때는 내적 ‘성향’(disposition) 때문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Mercer 1996). 리영희는 친구로 간주했던 중국의 핵개발은 정세의 탓으로 생각했지만, 적으로 생각했던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성향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이 안고 있는 ‘질병’의 뿌리로, 리영희는 “극단적 사유재산제”, “광신적 반공주의”, “군사국가화”를 언급했다(리영희 2006d, 316). 이 뿌리들이 미국의 “세계적 군사 패권주의”의 국내적 기초라는 생각이었다. 리영희의 미국 핵에 대한 ‘비판’은, 핵대결을 제한하는 이론들에 대한 비판과 미국 핵과 한반도의 관계라는 두 축에서 진행되었다.

리영희는 핵과 관련한 국제정치이론들의 현실구성 능력에 주목했다.

핵대결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이론의 주된 위험은, 핵전쟁의 물질적 측면

의 사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없이 그 같은 이론들이 함부로 신봉되고 또 행동의 근거를 구성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리영희 2006f, 298)

차가운 전쟁인 냉전을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로 서술할 때, 이른바 ‘공포의 균형’의 긍정성을 수용해야 한다. 핵국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처벌하겠다는 위협을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억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할 때(Morgan 2003), 이 국가들의 행동의 근거에는 공포의 균형에 대한 신뢰가 놓여 있다. 리영희의 공포의 균형 비판의 핵심은 그 이론의 ‘부도덕성’이었다.

1960년대에는 상호 저지를 토대로 한 전략적 관계의 개념이 ‘상호 확실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로 성격지어지고, 그 머리글자를 따서 ‘MAD’(광증, 미친 상태)로 불리었다. 이 MAD 관념은 쌍방 세계의 전체 비전투원을 볼모로 잡고 있는 까닭에 군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것으로 자주 비난받았다.(리영희 2006f, 299)

60년대와 70년대는 핵무기의 균형에 의한 전쟁 방지와 제1격의 처참한 파괴 및 제1격에서 살아남은 제2공격력(보복공격)의 잔존 가능성 때문에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핵전쟁의 발발을 억제한다는 군사이론에 근거해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를 내다 본 레이건 정부의 핵전략은, 앞에서 밝혔듯이, 미국이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핵경쟁의 각 국면, 각 단계에서 대소 핵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리영희 2006f, 285)

핵시대를 미·소의 세계지배 질서(Pax Russo-Americana)로 해석한 리영희는, 공포의 균형이 핵전쟁의 발발을 억제한다는 군사이론이 현실을 만드는 능력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론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전개했다는 점이 리영희적 국제정치이론의 한 특징이기도 했다.

리영희는 이 공포의 균형을 한반도 핵문제를 야기한 한 원인으로 제시했다.

미·소 간의 공격·방어 태세는 균형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선제 공격’은 상대방의 하위 동맹국가들 영토에 대한 공격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것이 곧 미국이 하위 동맹국가들 영토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했거나 배치하려는 전략의 목적이다. 우리도 그 범주에 속한다.(리영희 2006f, 285)

한미동맹에 따라 1950년대 중반부터 1992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던 이유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패배하면서 1970년대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했다.

박정희정부의 핵개발은 한미동맹을 거스른 국제정치적 쟁점이었다. 리영희는 역사적 사실을 찾고자 했다.

1972년에는 프랑스로부터 2,300만 달러 가격의 우라늄 재처리시설 도입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 박정희의 계획은 그 시설의 운영으로 나오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최초의 핵폭탄을 1975년에, 그리고 북한의 평양을 사정거리에 두는 사정 300km 수준의 최초의 미사일을 1976년에 완성하는 것이었다.(리영희 1999, 147)

그의 평가는 중국 핵과 마찬가지로 약소국중심적 시각에서, 남한의 핵개발은 “그것은 남한이 죽지 않기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선택이었다”(리영희 1999, 149)는 것이었다. 한미동맹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박정희정부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발언이었다.

연속선상에서 리영희는 한미동맹을 미국의 이익추구의 산물로 보았다. 1970년대 초반 리영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체결된 “한미방위조약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정책의 문서화”(리영희 2006a, 258)였고, “북괴에 의한 공격에 대한 예방으로서와 마찬가지로 남쪽에서 감행할지도 모를 대북공격을 방지하려는 의도”(리영희 2006a, 351)로 평가했다. 그리고 냉전시대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냉전시대의 특성인 종적 관계란 약소국 국민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강대국의 ‘애타심에 있는 것이기보다는 강대국의 독자적 이해판단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어두웠지 않았나 한다.”(리영희 2006a, 247)

한미동맹이 한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무기 배치와 그것을 수용한 한국 내의 반공주의가 결합하여 생산한 한국의 ‘핵무기 신화’에 대해 리영희는 가장 급진적인 비판을 했다.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영토 안에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도 핵무기 문제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본격적인 논의가 권력에 의하여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절멸주의의 범주' 이전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영희·임재경 1988, 3)

여기에 수입 국제정치학을 하는 지식인의 '사대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덧붙여졌다.

자기 나라를 어느 한 초핵강대국들 또는 두 핵대국의 핵전쟁의 불모로 맡겨놓고서도 그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남에게 그렇게 믿게 하려는 '이론·학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설교하는 지식인이 있다.(리영희 2006i, 13-4)

결국, 리영희가 제안하고자 했던 길은, "핵신(核神)"과 "핵종교(核宗教)"(리영희 2006i, 132)에 의존하는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였다. 중국의 핵과 박정희정부의 핵개발과 같은 군사적 방법에 의한 평화 또는 내적 세력균형정책을 약소국의 시각에서 옹호하면서도, 따라서 리영희적인 약소국 중심적 국제정치이론이 불가피하게 산출할 수밖에 없는 긴장과 모순이지만, 리영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은 안보딜레마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반핵·평화운동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평화는 군사력으로 유지되고, 강력한 군사력만이 국가와 세계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무서운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리영희 2011, 267)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군사적 대결구조를 촉진하고 강화해 그것을 영구화하면서 '평화'라고 강변하는 사람이 있다.(리영희 2006i, 13)

리영희에 따르면, "“무기 숭배자”들이 이성을 되찾”게 하는 추동력은, “반핵운동”의 열렬한 민중적 염원과 행동”(리영희 2006f,)이고, 한국은 “오직 하나의 예외”(리영희 2011, 269)로 반핵·평화운동이 부재한 땅이었다.

3. 북한의 핵: 한반도 핵문제 (2)

1980년대 초반 리영희는, “북한에는 아직 핵무기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리영희 2006f, 288)고 썼다. 그러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지구적 수준에서 냉전이 해체되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는 냉전 해체는 비대칭적이었다. 한국은 소련, 중국과 수교했지만,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하지 못했다. 다시금 한반도 핵문제가 제기되었고, 1970년대와 달리 발원지는 북한이었다. 리영희는 중국 핵과 미국 핵에 이어 북한 핵이라는 국제정치적 쟁점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1999년 즈음에 쓴 글에서 밝힌 그의 생각은, “입장을 바꾸어 한 번쯤 북한의 처지에 서서 생각해 보는 이성적 태도가 아쉽다”(리영희 1999, 161)는 것이었다. 즉 북한 핵을 ‘이해’하려 했다.

두 번째 한반도 핵문제 발생과 관련하여 리영희는 미국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1957년 미국은 정전협정 제2조 12(d)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핵무기 반입을 위한 것이었다. … 미국이 정전협정을 어기고 핵·미사일을 도입하기 시작한 1956년부터 30년간 북한은 중·소의 핵·미사일 없이 비핵 정책을 지키다가, 소련의 핵우산 포기(1991년) 통고를 받고 충격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자체적 핵·미사일 군사화에 돌입하였다. 미국은 이 사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리영희 1999, 155)

또한 1970년대 한국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했다. “남·북한은 그 대치적 조건·환경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행동·선택의 체계가 거의 일치한다”(리영희 1999, 149)는 이유에서였다.

한반도의 남·북은 그 어느 쪽이건, 배후적 강대국에 버림받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그런데가가 국내적 제반 생명력이 쇠퇴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흡수통합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압도적 열세의 상태에 몰린 한쪽은 국가적 존립의 위기를 타개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최후의 ‘자위적’ 선택을 하게 된다. 핵무기와 미사일이 그것이다.(리영희 1999, 194)

북한의 논리의 반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리영희는 이 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북한 말살정책에 있다”(리영희 1999, 156)고 보았다. 결국 리영희에 따르면, 미국의 변화만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란 추론을 하게 된다.

리영희가 북한의 핵개발을 이해하려 했지만, 북한의 핵보유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1992년 발언이다.

북한의 핵시설이 핵폭탄(무기용) 제조를 서두르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그것은, 1970년대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이 대북한용으로 핵무기 개발을 서둔 것처럼 거부되어야 할 일이다.”(리영희 2006e, 70)

리영희의 동요가 보이는 대목이다.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약소국의 핵보유를 긍정 또는 이해했던 그도 그 정책선택이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를 하지 않을지라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영희는 회의적이었다. 1992년의 시점에서 리영희는,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굴복하기를 거부해온 몇 안 되는 약소국가 가운데 하나(로), 이제 그 자세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미국은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리영희 2006e, 80)고 썼다. 견지했던 약소국중심적 시각에서 리영희가 중국의 외교정책에서 발견했듯이, “약자가 공존을 요구하고 강자가 냉전정책을 추구하는 방식”(리영희 2006h, 353-4)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 셈이다.

그럼에도 탈냉전시대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이 필요함을 그도 인정했다. 일단,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대응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듯하다.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과 남한의 독자적 대응은 필연적으로 일본과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미사일 ‘보호 우산’의 무력화를 초래한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거의 영구적인 군사적(내지 정치적) 지배권의 자동적 붕괴를 뜻한다.(리영희 1999, 130)

리영희의 대안은, 한반도 핵문제를 보는 “복안(複眼)적 인식능력”과 “비핵지대화”와 “평화조약”이었다(리영희 1993).

'나'의 입장과 함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사물을 관찰하는 '양안적 능력'은 '최저한'의 기본자격 조건이다. ... 민주사회의 '지성인'들에게는 그 수준의 관찰능력에 그치지 않고 '복안(複眼)'적 인식능력이 최저한의 요건이 된다. ... 소위 '북한핵'의 원인과 책임을 말하라면 북한·남한·미국이 각기 3분의 1씩 원인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 협력 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한은 북한의 생존에 대한 위협적 요소들을 스스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초반 리영희는 미국 핵만이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조건에서 비핵지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비핵지대화’야말로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평화적 생존과 나아가 어느 날엔가는 이루어질 통일을 기약하는 ‘80년대 전제조건’이라고 생각”(리영희 2006c, 17)했던 것이다. 이른바 두 번째 한반도 핵위기가 시작될 즈음인 1991년 그 제안은 보다 구체적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

한반도의 민족이 남·북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내일의 삶의 방식은 한반도의 '비핵화+비핵지대화' 구조다. '비핵화'는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각기,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그 해당 지역(영토 영해 영공)에(서) 핵무기의 제조, 수락, 보유, 배치, 통과를 금지하는 결정이며, 그 결정이 이행된 '핵무기 공백'의 상태다. '비핵지대화'는 그 결정과 구조를 한 단계 확대하여, 간접적(또는 외곽) 국가들까지 합쳐서, '비핵화' 조치의 내용에 '핵무기의 사용금지'를 추가한 구조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대한민국의 3자로서 '비핵화'를 이루고, 소련, 중국, 일본을 합쳐서 남·북한(한반도)을 '비핵지대화'하는 것이다.”(리영희 2006e, 54-5)

이 비핵지대화를 평화조약과 함께 한반도, 동북아, 세계적 수준에서 평화를 이루는 길로 생각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제거하고, 잠정적인 정전협정을 확고하고 영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함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야 할 줄로 안다. 이것만이 한반도가 다시 동북아시아의 핵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유도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리영희 2006h, 131)

리영희의 북한 핵에 대한 '이해'와 거부 사이의 동요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전통적 현실주의의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한 동의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미국 핵 ‘비판’과 모순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약소국중심적 시각의 산물이다. 그러나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힘에 의한 평화가 정당화된다는 발상은 힘의 정치를 고려할 때도 위험하다. 약소국이 생존을 힘에 의지할 때, 힘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힘의 대결과 함께 고려하고 있는 비핵지대와 평화조약의 병행추진은 사실 약소국중심적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IV. 탈식민적, 탈패권적, 탈분단적 ‘국제정치이론’

리영희는 추상적 개념들의 연쇄로 체계화한 국제정치이론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론이 도구이자 비판이고 실천이라면, 리영희의 국가이익 비판과 핵에 대한 국제정치비평에서 우리는 ‘국제정치이론’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인 시각의 집합을 추출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물론 체계화한 국제정치이론의 부재는 리영희 내부의 모순 때문일 수 있다. 국가이익의 개념을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모순, 같은 핵무기일지라도 특정한 시각에 기초하여 긍정하거나 비판하거나 이해하려는 모순 등이 야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제도권 국제정치학자가 아니라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국제정치비평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문제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묻고 그 현실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리영희의 ‘비판’은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변혁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이었다(구갑우 2008). 그 비판적 실천은, 이론화하는 것이 삶의 방식, 삶의 형태일 때 즉 이론이 매일의 실천일 수 있다면, 국제정치이론의 존재론과 분리할 수 없는 구성요소가 된다. 이 맥락에서 리영희에게는 ‘비판적 실천’으로서 ‘국제정치이론’이 있(었)다. 그 실천은, 맑스주의자 그람시(A. Gramsci 1971; Rupert 2009)적 의미에서, 상식(common sense)에 대한 비판이지만 상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람시의 흔적은 여진이지만 리영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영국의 정치에는 그렇게 많고 심오한 이론이 동원되질 않는다고 한다. 이론으로 안될 때는 상식에 맞는 것이 영국 국민의 지혜고 생활경험이다. 상식이란 무엇인가.

소박한 민중이 까다로운 이론조작·설득·세뇌 노력 없이 오랜 생활 경험으로 옳거나 그르거나를 판단하는 바로 그것이다.(리영희 2010, 31)

그림시는 이 상식에 기초한 상식비판을 통해 전위와 대중이 구분되지 않는 정당과 같은 집합적 인간의 역사적 행동을 상상했지만, 리영희는 고독하게 국제정치비평으로 현실에 개입한 지식인이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의식”은 주었지만 ‘방법’과 성공의 ‘보장’을 제공하지 않”(리영희 2006d, 355)은 것에 회한할 때, 고독의 책임이 묻어난다.

리영희의 상식에 기초한 상식비판의 출발점은 냉전적인 이분법적 의식에 대한 비판이다.

냉전용어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계의 모든 정치적·사회과학적 사상(事象)을 흑과 백, 천사와 악마, 죽일 놈과 살릴 놈, 악과 선의 이치적(二值的)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버릇이 생겼다.(리영희 2006, 355)

예를 들어 남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의 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27만 명이 참가한 틱스피리트 훈련은 ‘방위’ 목적이고, 소련해군과 북한군 7,000명이 참가한 훈련은 당연히 ‘공격’ 목적이 된다. 우리의 인식능력에 어떤 결함은 없는지? 적이 궁금하다.(리영희 2006d, 192)

이 이분법적 인식에 대한 비판에 기초해서 진행된 리영희의 국제정치비평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국제정치이론’은, 리영희가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는 개념들이지만, ‘탈식민’, ‘탈패권’, ‘탈분단’을 지향하는 그리고 그 방향으로 현재적 맥락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는 ‘국제정치이론’이(었)다. 이 세 ‘탈’들(posts)은, 이후(after)보다는 넘어서(beyond)의 의미다.

탈식민주의는, 식민현상의 역사와 유산을 피식민인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담론과 이론 그리고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Young 2001).⁸⁾ 탈식민주의는 비

8) Brydon(2000)으로 편집된 다섯 권의 책은 탈식민주의의 다양한 경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논문 모음집이다.

영토적 제국주의적 패권의 유지 및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역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운동적 개입 및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와 차이가 있다. 즉 이차대전 이후 탈식민주의는 탈제국주의 및 ‘탈패권’을 지향한다. 그 기원과 현존의 역설적 결합의 표현인 “탈식민적 제국주의국가” 미국을 문제화한다(Slate 2004). 신식민주의와 또 다른 차이는 세계체제 또는 국제체제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초국적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탈식민주의는 제국주의 대 민족주의와 같은 힘의 정치를 야기하는 이항대립을 넘어서려 한다.

리영희는 스스로 “40대의 젊은 시절”까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리영희 2006d, 355). “민족적 이성”(리영희 2010, 78)과 같은 용어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국제정치비평에는 동요가 있었지만, 국가이익 개념을 도구로 수용하면서도 국가이익 개념 비판을 통해 시민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그는 미국을 비판하지만 민족주의를 넘어서(beyond) 가고 있었다(강준만 2004). 탈식민주의의 이론가였던 파농(F. Fanon 2004)이 지배적인 종(種)만이 중요한 동물원처럼 국제관계가 ‘동물학적 관계’라고 비판한 것처럼(Muppidi 2009), 리영희는 동물학적 관계를 파괴하는 약소국중심적 시각을 견지하고자 했다. 그의 중국 핵에 대한 긍정은 약소국중심의 연대라는 탈식민적/탈패권적 기획의 과잉의 소산이었다. 그럼에도 리영희는 국제정치에서 인도의 여성농민처럼 말할 수 없는 ‘하위행위자’(subaltern)가 추구하는 반핵·평화의 연대야말로 동물학적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인 식민적·식민화된 “무기 숭배자’들이 이성을 되찾”게 하는 동력이라 생각했다(Cf. Kinvall 2009).

한반도적 맥락에서 탈식민적/탈패권적 기획의 물질화와 관련해서도, 리영희는 1970년대에 “한일 군사동맹의 체결 없이도 한 변이 없는 삼각형 형식의 한미일 동맹 안보체제”(리영희 2006a, 535)를 지적했고, 한국과 일본이 1990년대에 군사동맹적 관계를 완성할 것이라는 틀린 예측을 하기도 했지만(리영희 2006i, 123),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성공여부는 거의 숙명적으로 일본의 태도와 정책에 달려 있”(리영희 1999, 239)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 다음과 같은 권고는, 식민성을 넘는 것은 물론 식민적 유산의 당대적 표현인 미국패권을 넘어서려는, 리영희의 탈식민적/탈패권적 기획의 진수를 보여준다.

미국과의 예측적 '한미 방위조약'을 친선우호관계 조약으로 대치하고, 그 거리만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 향상하는 국가관계를 추구하고 동북아시아 내 중심역할과 등거리외교를 채택하는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도록 평양에 가서 말씀하시면 어떻겠는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리영희 2006j, 375)

위의 진술은 리영희의 탈식민적/탈패권적 기획이 한반도적 맥락에서 탈분단의 기획과 조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한반도의 사회적 장벽(social partition) 또는 분단은 전형적인 식민적, 패권적 유산이다. 사회적 장벽은, 과거 행정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실체였지만 패권적 질서가 지속되는 탈식민시대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로 분할되고 그 개체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이전의 국가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주장하면서 형성된다(Waterman 1989). 한반도의 탈식민적 분단에 담겨 있는, 이후와 넘어서의 긴장은, 탈식민적 분단의 극복을 통일이 아닌 '탈분단'으로 개념화할 수 있게 한다. 탈분단은, 북한을 타자화 또는 도구화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또한 폐쇄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반대하면서도 분단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자는 담론이다(조한혜정·이우영, 2000).

리영희는 남북한 관계가 힘관계의 변화에 따라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에 대한 유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 바 있다. 리영희가 “남·북 단위의 ‘반민족주의’(半民族主義)가 아니라 반도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를 통한 남북한의 화해를 언급하기도 했지만(리영희 2006f, 292), 탈식민적 분단의 극복형태로 통일이 제시될 때 타자의 소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리영희가 북한 핵을 ‘이해’하고자 했을 때, 북한 핵은 제국주의 대 민족주의와 같은 이항대립 또는 내적 세력균형정책의 산물이지만, 그 이항대립을 넘어서서 탈식민주의에 내장된 평화공존과 같은 타자와 ‘공감’하려는 태도(은용수 2016)로 보이기도 했다. 리영희는 1970년대부터, “전쟁은 동물적 생존본능의 에너지를 발생케 하는 것이지만, 이체제(異體制) 간의 공존은 그와는 전연 다른 이성과 이상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방식이”(리영희 2006a, 353)란 점에 주목하고 있었고, “새로운 동아시아의 지역적 틀이 건설되어야 하는 첫 번째 차원은 한반도”(리영희 1999, 239-40)라는 탈분단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비판과 실천으로서 국제정치이론이 제기하는 근본적 질문은, 정치이론의 근본적

질문인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중심적 편향일 수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국제사회든 무정부적 체제든 그 속에서 어떻게 주권국가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일 수 있다(Edkins and Vaughan-Williams 2009). 이 질문은 다양한 시각들의 집합인 국제정치이론‘들’의 공존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번역될 수 있다. 만약 모든 이론이 특정한 시각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그런데 어떤 이론이 참이라 주장한다면, 그 이론을 참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행 시각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리영희의 실천으로서의 국제정치비평이 추구했던 현실 비판과 그에 기초한 미래 기획은,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을 지향하는 국제정치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리영희에게 모순처럼 잠재해 있던 국제정치이론의 핵심을 그 세 ‘탈’로 집약하는 것이 리영희라는 ‘우상’(강준만 2004)에 대한 비판의 지점이라 생각하며, 이 글이 수행한 리영희 해석의 현재적 생존가능성을 묻게 된다.

투고일: 2016년 12월 16일

심사일: 2017년 1월 24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20일

참고문헌

- 강준만. 2004. 『한국현대사의 길잡이, 리영희』. 서울: 개마고원.
- 구갑우. 2014.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17: 1, 197-250.
- _____. 2008. 『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 서울: 후마니타스.
- 구영록. 1996.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 법문사.
- 김동혁·채준형. 2017. “중국과 소련의 핵 개발 협력, 1949-1960.” 한국냉전학회 국제학술대회.
- 김삼웅. 2010. 『리영희 평전』. 서울: 책보세.
- 리영희. 1977. 『8億人과의 對話』. 서울: 창비.
- _____. 1983. 『10億人의 나라』. 서울: 두레.
- _____. 1993. “남북화해와 군축의 새시대를 열자.” 『월간 말』(10월), 58-63.
- _____. 1999. 『반세기의 신화』. 서울: 삼인.

- _____. 2005. 임헌영 대담. 『대화』. 파주: 한길사.
- _____. 2006a[1974]. 『전환시대의 논리』. 파주: 창비.
- _____. 2006b. 『스핑크스의 코』. 파주: 한길사.
- _____. 2006c. 『분단을 넘어서』. 파주: 한길사.
- _____. 2006d. 『自由人, 자유인』. 파주: 한길사.
- _____. 2006e.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파주: 한길사.
- _____. 2006f.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 파주: 한길사.
- _____. 2006g. 『역정: 나의 청년시대』. 파주: 한길사.
- _____. 2006h. 『우상과 이성』. 파주: 한길사.
- _____. 2006i. 『역설의 변증』. 파주: 한길사.
- _____. 2006j. 『21세기 아침의 사색』. 파주: 한길사.
- _____. 2010[1991]. 『인간만사 새옹지마』. 파주: 범우사.
- _____. 2011. 임헌영 편. 『희망』. 파주: 한길사.
- 박건영. 2012. “핵무기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 미래,” 이수훈 편, 『핵의 국제 정치』, 9-47. 서울: 경남대 출판부.
- 박상섭. 1988. “한국국제정치학과 외래이론수용의 문제점.” 『국제정치논총』 28: 1, 23-33.
- 백창재·구갑우. 2002.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의 형성과 적용.” 『한국정치연구』 11: 2, 241-267.
- 은용수. 2016. “‘비주류’ IR이론과 한국의 국제정치문제.” 『국제정치논총』 56: 3, 51-88.
- 이근욱. 2007.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김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3-42.
- 이영희·임재경 편. 1988. 『반핵: 핵위기의 구조와 한반도』. 서울: 창비.
- 이용희. 2013[1962]. 『일반 국제정치학(상)』. 서울: 도서출판 이조.
- 조한혜정·이우영 편. 2000. 『탈분단 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 Barash, D. and Webel, C. 2002. *Peace and Conflict Studies*. London: Sage.
- Brydon, D. 2000. *Postcolonialism: Critical Concepts, Vol. I, II, III, IV, V*. London: Routledge.
- Cox, R. 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10: 2.
- Edkins, J. and Vaughan-Williams, N., ed. 2009. *Critical Theoris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 Edkins, J. and Vaughan-Williams, N. 2009. “Introduction.” in Edkins and Vaughan-Williams(2009), 1-6.

- Erskine, T. 2013. "Normativ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T. Dune et., e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Discipline and Diver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non, F. 2004.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서울: 그린비.
- Gilpin, R. 1986. "The Richness of the Tradition of Political Realism." in R.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amsci, A. 1971. *Selection from the Prison Notebooks*. edited and translated by Q. Hoare and G. Smith. London: Lawrence & Wishart.
- Hoffman, S.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106: 3, 41-60.
- Keohane, R. ed. 1986.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nvall, C. 2009. "Gayatri Chakravory Spivak." in Edkins and Vaughan-Williams(2009), 317-329.
- Laski, H. 1930. *Liberty in the Modern State*. New York: Harper & Bros.
- Mercer, J. 1996.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organ, P. 2003. *Deterrence N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genthau, H. 1973.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 New York: Knopf.
- Muppidi, H. 2009. "Frantz Fanon." in Edkins and Vaughan-Williams(2009), 150-160.
- Niebuhr, R. 1932.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 Rupert, M. 2009. "Antonio Gramsci." in Edkins and Vaughan-Williams(2009), 176-186.
- Slate, D. 2004. *Geopolitics and the Post-colonial*. Oxford: Blackwell.
- Waltz, K.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 Walt, S. 2011. "Is International Relations still 'an American Social Science?'" *Foreign Policy*, June 6.
- Waterman, S. 1989. "Partition and Modern Nationalism." in C. H. Williams and E. Kofman, eds. *Community Conflict, Partition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 Wittner, L. 2009. *Confronting the Bomb: A Short History of the World Disarmament Movemen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Young, R. 2001. *Postcolonialism: An Histor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Zalewski, M. 1996. "All these theories yet the bodies keep piling up': theories, theorist, theorising." in S. Smith, K Booth, and M.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0-353.

ABSTRACT

Lee Young-hee's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s
Critique and Practice:
A Path for Post-Colonial, Post-Hegemonic, and
Post-Division System

Kab Woo Koo |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aims at visualizing Lee Young-Hee's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through his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Reviewed materials include writings on how Lee Young-hee perceived and criticized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s, and his critiques o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round nuclear weapons of China, the U.S., and North Korea. Lee as an organic intellectual has not delivered a systemized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ecause he did not engage in academic research within scholarly communities. Theory can be a tool for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the world as it is. However, it also relates to critique for making sense of how the world got to be as it is, and to everyday practice in that theorizing is a way of life. As such, the paper describes Lee Young-hee's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as critique and practice in pursuit of a path for post-colonial, post-hegemonic and post-division system.

Keywords: Lee Young-hee,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tool, critique, practice, post-colonialism, post-hegemony, post-division system